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강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8826-7629)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정기획위 신속 과제 발표 10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5. 10. 27.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전세사기 없는 사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정기획위 신속 과제 발표 10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0월 28일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60여일 지났음. 지난 7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신속매입, ▲신탁사기 신속구제, ▲피해자 선정 과정 상세 설명 등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음.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피해자 선정 과정 상세 설명’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 신속 추진 과제 시행을 위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음. 즉, 신속 추진 과제 발표 100일이 넘도록 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정부가 약속한 신속 과제 추진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들쭉날쭉한 피해회복률을 고려한 최소보장 방안 마련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및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발의, 처리하지 않고 있음. 특히, 전세사기 및 강통전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전무함. 전세사기와 갇통전세를 야기한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대차 행정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

-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피해자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 추진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세사기·갇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갇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 순서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1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2 : 안상미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발언3 : 김태욱 경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
 - 발언4 : 안산하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 발언5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면담 요청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02-723-505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